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인증 필요성 및
지정확대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한·EU FTA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uthorisation of "Approved
Exporter" and the Plan to Expand the System
- Focused on Korea-EU FTA -



指導教授 金 煥 成

2011 年 8 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際關稅學科

崔 康 洙

본 논문을 최강수의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 원 장 유 일 선 (인)

위 원 신 용 존 (인)

위 원 김 환 성 (인)



2011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장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4
2.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개요	4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4
2)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연혁	5
2.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6
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6
2)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보완요구	9
3)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10
4)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11
2.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12
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12
2)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보완요구	14
3)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15
4)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15

제 3 장 한 · EU FTA와 인증수출자 제도 17

3.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7
1) FTA 추진 현황	17
2)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18
3.2 한 · EU FTA 추진 현황	19
1) 한 · EU FTA의 의의	19
2) 한 · EU 산업별 및 주요품목별 교역현황	20
3) 한 · EU FTA 추진 경과	22
4) 한 · EU FTA 협상 주요 내용	25
3.3 한 · EU FTA 인증수출자 인증의 필요성 및 혜택	34
1) 인증수출자 인증의 필요성	34
2) 인증수출자 지정시 혜택	34
3.4 한 · 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	37

제 4 장 한 · EU FTA 인증수출자 지정확대 추진 방안 40

4.1 정부의 단계별 추진 방안	40
1) FTA 행정수요에 맞는 관세행정 조직 확대 개편 필요성	40
2) 타협정 인증기업 EU인증수출자로 전환 및 사전검증 활용	41
3) 우선인증기업 파악관리를 통한 적극적 인증지정	41
4) 행정지도·홍보·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인증지정 확대	42
4.2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43
1) 대(對)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 완료	43

2) 친기업적 인증수출자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44
3)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통합관리 체제 마련	45
4) 수출기업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확대 및 통관애로 해소 지원	46
4.3 향후 EU측 세무조사 대비 행정 지원	47
제 5 장 결 론	48
5.1 연구 결과	48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0
참고 문헌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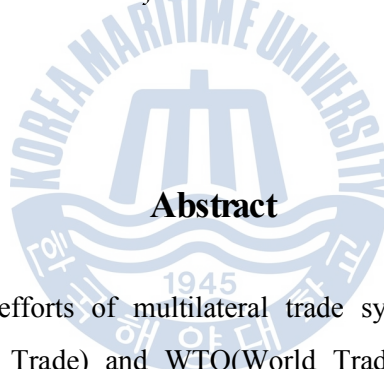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2-1>	업체별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기준 점수	8
<표 2-2>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변동사항	11
<표 2-3>	품목별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기준 점수	13
<표 2-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업무 흐름도	16
<표 3-1>	한국의 FTA 추진현황	17
<표 3-2>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18
<표 3-3>	한국과 EU 및 주요 국가 간 교역 및 투자 현황	20
<표 3-4>	한·EU 산업별 교역 현황	21
<표 3-5>	한·EU 10대 교역품목 현황	22
<표 3-6>	한·EU FTA 협상 개최 일시 및 장소	24
<표 3-7>	양허 단계별 공산품 관세 철폐	25
<표 3-8>	상품 관세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공산품)	26
<표 3-9>	상품 관세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농산물)	28
<표 3-10>	섬유류 미소기준 적용	31
<표 3-11>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31
<표 3-12>	주요 농산물 원산지 규정	32
<표 3-13>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36
<표 3-14>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	37
<표 3-15>	인증수출자 지정 총괄 현황	38
<표 3-16>	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 희망 여부 등 설문조사 결과	39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uthorisation of “Approved
Exporter” and the Plan to Expand the System
- Focused on Korea-EU FTA -**

Choi Gang-Soo

*Major in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In contrast to the past efforts of multilateral trade systems under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WTO(World Trade Organization) to create a borderless global market, a regionalism has been spreading across the world rapidly as an increasing number of nations adopt FTA(Free Trade Agreement).

Korea has already been maintaining effective FTAs with 16 countries since the country's first FTA with Chile came into effect in 2004. The Korea-US FTA was executed by Washington and Seoul respectively and it was scheduled to be ratified by the congresses of the two na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working on FTA with various countries.

Particularly, Korean companies need to be authorized as "Approved exporters" in order to obtain preferential tariffs on their shipments of products priced 6,000 EURO or more to the EU market as the Korea-EU FTA comes into effect in July

2011. However, only a few Korean firms have been authorized because of the lack of interests among CEOs and poor origin verification system.

Therefore, the necessity of "Approved exporters" system and benefits from authorisation under the Korea-EU FTA will be examined in three 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s office.

First of all, the government's promotional plan is proposed to be composed of the expansion of customs administration system to meet the growing administrative demand on FTA, authorisation of companies approved for other FTAs as "Approved exporters" to EU, proactive authorisation of high-priority companies, and expansion of authorisation through administrative guides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in sequence.

The measures to support exporters are proposed to be composed of the early completion of authorizing companies as "Approved exporters to the EU market, business-friendly examination of authorized exporters and better follow-up managements, simplification of origin certification procedure and integrative administration, and plans to expand prior origin verification service for exporters and resolve troubles on customs clearance.

Lastly, the administrative supports of government and customs office are proposed to prevent Korean exporters from being excluded from preferential tariffs and levied penalties through providing guides on the authorisation of exporters in preparation for tax audits from the EU authorities, aiming to help Korean exporters for the EU market better understand and utilize the authorisation system.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국과의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국가간의 무역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전 세계 통상국가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려 하였지만,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주의는 1992년 유럽연합(EU)¹⁾의 출범과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도 기존의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하여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이후 싱가포르, EFTA²⁾,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기업지원, 원산지 제도 운영, 절차 간소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업무, 국내 피해산업 보호, FTA 집행 업무 등에 대한 정부의 체

1)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7년에 6개국으로 출범한 이후 확대작업을 거쳐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증가했으며, 경제통합 수준도 관세동맹(1968년)에서 공동시장(1993년)을 거쳐 경제통화동맹(1999년) 등으로 심화되었음.

2) 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EU는 총 인구 5억명, 세계 전체 GDP의 28.3%인 약 16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유럽연합 27개국의 상품교역규모는 '09년 기준 미국의 14.1%, 중국의 10.4%를 크게 앞서며 세계 전체 교역의 17.1%를 점유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대 교역국인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 앞서 EU와 FTA 협상을 타결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발효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대표 국가로서의 위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EU와 아시아 국가들 간 상품·자본의 교류를 위한 관문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는 선진경제국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경제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진 EU산(産) 식품과 물품 등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어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한·EU FTA가 '11.07.01 발효 예정이며, 한·EU FTA 체제하에서 6천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10.04에 도입되어 EU로 수출하는 생산자 및 수출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나 내용 등에 대하여 준비가 부족하거나 그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U와의 FTA 본격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확대 추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가 행해지지 않은 실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FTA 협정문,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규정, 국제기구 통계자료, FTA 관련 주요 기관 홈페이지, 한국의 주요 정책기관 연구자료, 특히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방법으로 단계별 추진방안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EU FTA 하에서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통한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부족하였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의 수출기업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개요, 연혁 및 내용을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와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EU FTA의 의의, 산업별 및 주요품목별 교역현황, 추진경과, 주요 협상내용의 요약, 구체적인 원산지에 관한 기술, 인증수출자 인증의 필요성과 혜택 및 인증수출자 지정현황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확대 추진방안을 단계별 정부 추진방안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제 2 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2.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개요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1)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의 의미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³⁾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를 의미한다.

(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⁴⁵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누어진다. 먼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규준수도 및 증명능력을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인증한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협정별, HS⁴⁾ 6단위를 기준으로 관세청 산하 6개 본부세관⁵⁾, 평택, 울산, 안산, 진주세관에서 인증하며, 인증

3)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시 제출하는 서류.

4) HS협약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조화(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관한 국제협약의 줄임말로,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말한다. HS 협약상 HS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며, HS 7단위부터는 각 체약국의 자율에 의하여 운용된다.

5)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본부세관.

유효기간은 모두 3년이다.

(3) 관련규정

한·EU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한·EU 협정문 원산지예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에서는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 2(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연혁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연혁

‘07.06.01 한·아세안 FTA 발효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어 ‘08.07.15.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모델별 및 규격별 인증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10.04.01 기존의 모델별 및 규격별 인증제도의 이용이 적음에 따라 향후 발효예정인 한·EU FTA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또한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다.

(2) 생산공장 보유업체 제도

‘07.06.01 시행된 생산시설 소유 및 임대자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

산자로 최근 2년간 수출 50건 이상, 연평균 100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과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전년도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실적 20건 이상, 발급오류 비율 5% 이하의 요건을 갖춘 수출자에게 원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3)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인증수출자 제도

‘08.07.15 시행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인증제도로, 원산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 특례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자의 요건을 갖추고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미반려자를 대상으로 모델·규격별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4)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10.04.01 전면 개정 시행된 제도로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원산지 증명능력을 보유한 업체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리고 HS 6단위 품목별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원산지 전담관리자를 지정한 자로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 특례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자로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미반려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2.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1) 수출물품의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보유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및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원재료 관리에 있어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원산지확인서 또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 내용을 확인하고,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와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원산지 기준 관리에 있어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해당 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기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셋째,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에 대하여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여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다. 또한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에 있어 프로세스 적정 여부 확인과 주요 수출품목(5개 이내)에 대하여 서류 확인을 하여야 한다.

넷째,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증빙 자료 관리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서류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이 있으며, 수출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에서는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과 외부 전문가 지정으로 구분하며 FTA특례고시 제2-4-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갖춘 경우 이하 심사 생략) 해당자격증 확인으로 지정하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이수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표 2-1> 업체별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기준 점수

내 용	점 수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기관발급에 한함)	건당 1점(최대 15점)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시간당 2점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5점(관세업무 담당 변호사·관세사 : 20점)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FTA 컨설팅 실적	건당 5점(최대 15점)
FTA 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이내 2점, 2년이내 3점, 3년이내 4점, 3년이상 5점)

자료 : 기획재정부 FTA 활용 및 실무 매뉴얼 등 재구성, 2011년

외부 전문가 지정시 관세사·변호사(FTA 특례법 제13조 제9항)등 지정대상으로 하며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인증 후 관리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기관발급 포함)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4) 법규준수도 확인

최근 2년간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의 공문에 의한 자료로 확인하며 처벌이력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FTA 관세특례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력 및 전산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중에서 관세청, 관할세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공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5) 현지실사 확인

수출(생산)기업 방문시 현지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에 따른 원산지 판정 시현과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에 대하여도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원재료 공급업체 방문시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공정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 실태에 대하여도 견본확인 방법 등에 따라 확인한다.

2)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보완요구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

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⁶⁾,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⁷⁾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이 생략 가능하다.

또한 제출서류의 보완요구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및 FTA 특례고시 제2-4-8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정을 요구할 시 보정하여야 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고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수출자 사후 관리에 있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 내

6) 수출용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7) 전산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표 2-2>에 열거한 바와 같이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 대상 및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확인 방법으로 FTA 특례고시(제4장 제2절)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표 2-2>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변동사항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인증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지정된 외부 원산지 전문가가 당해 업체에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료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FTA 활용 자료, 2011년

4)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은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와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이며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

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벌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예정 10일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1)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첫째, 생산 공정 확인에 있어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와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은 주요 수출(생산)품목 5개 이내를 선정하여 원산지소명서상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원산지확인서 및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방법으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2) 품목별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에서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 지정으로 구분하며, FTA 특례고시 제2-4-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심사 생략) 해당자격증 확인으로 지정하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이수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표 2-3> 품목별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기준 점수

내 용	점 수
원산지 관리 담당자용 업무매뉴얼	5점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건당 1점(최대 5점)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시간당 2점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5점(관세업무 담당 변호사·관세사 : 10점)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FTA 컨설팅 실적	건당 5점
FTA 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 이내 2점, 2년 이내 3점, 3년 이내 4점, 3년 이상 5점
FTA 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 이내 2점, 2년 이내 3점, 3년 이내 4점, 3년 이상 5점

자료 : 기획재정부 FTA 활용 및 실무 매뉴얼 등 재구성, 2011년

외부 전문가 지정시 관세사·변호사(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9항) 등 지정 대상으로 하며,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인증 후 관리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기관발급 포함)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4) 법규준수도 확인

최근 2년간 FTA 관세특례법 법 제13조 제2항에 다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의 공문에 의한 자료로 확인하며 처벌이력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완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전산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5) 현지실사 확인

수출(생산)기업 방문시 현지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확인과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에 대하여도 주기, 대상, 강사, 교육 및 콘텐츠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원재료 공급업체 방문시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공정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 실태에 대하여도 견본확인 방법 등에 따라 확인한다.

2)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및 보완요구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하에서의 제출 서류와 동일하며, 다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가 아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 있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하에서 제출하여야 했던 전산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외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3)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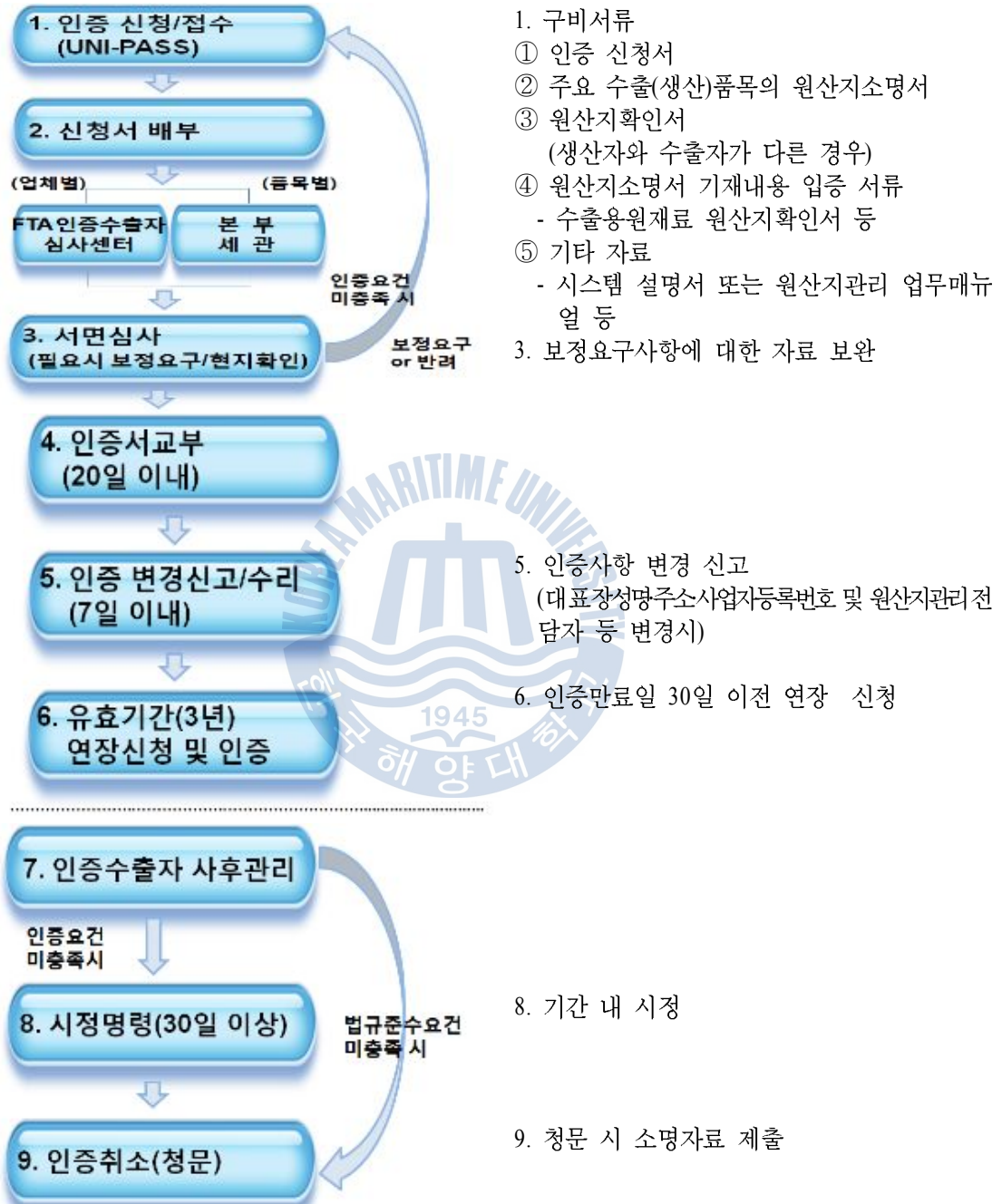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하에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4)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은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이며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예정 10일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표 2-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업무 흐름도



자료 : 부산세관 FTA 활용지침, 2010년

제 3 장 한 · EU FTA와 인증수출자 제도

3.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 FTA 추진 현황

한국은 '11.03월말 한·칠레 FTA('04), 한·싱가포르 FTA('06), 한·EFTA FTA('06), 한·아세안 FTA('07), 한·인도 FTA('10) 등 5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에 있으며, 2010.12 한국과의 '09년 기준 교역량이 22%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페루 등 29개국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어 그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남미의 콜롬비아, 호주, GCC⁸⁾, 터키 등 12개국과도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시아 권역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FTA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 중인 국가도 12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FTA를 통하여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표 3-1> 한국의 FTA 추진현황

(‘11. 3월 현재)

구 분	발효 (16개국)	협상완료 (29개국)	협상중 (12개국)	여건조성 (12개국)
FTA 상대국가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페루	콜롬비아, 호주, GCC, 터키 등	중국, 일본, 러시아, Mercosur
교역비중 (‘09기준)	14%	22%	24%	24%
누 적	14%	36%	60%	84%

자료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FTA 추진현황 자료, 2011년

8)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2)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16개국과의 수출·입 전체 교역량을 살펴보면, '06년도에는 교역량이 635억 달러였으나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10.09 까지의 교역량은 70% 증가한 949억 달러이다.

또한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은 '06년 10%에서 매년 10~13% 증가하여 '10.09 까지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발효된 FTA 실질 활용률은 한·칠레 FTA의 경우 수출 금액 기준으로 '05년 86%에서 '08년 97%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고, 수입의 경우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EFTA FTA의 경우 수출입 모두 30%대의 FTA 실질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하에서는 '07년도 수출 1.3%에서 '10.05 까지는 21%를 나타내고 있고, 수입에서는 '07년도 8.8%에서 '10.05 까지의 활용률은 49%를 보이고 있다. '10년 발효된 한-인도 FTA의 경우 '10.05 까지 수출 활용률이 15.4%, 수입 활용률이 7%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1~9
FTA 발 효 국	수 출	311	385	491	451	510
	전년대비	18.3%	23.8%	27.5%	△ 8.1%	29.6%
	수 입	324	371	449	417	439
	전년대비	17.8%	14.5%	21.0%	△7.1%	34.6%
	교역액	635	756	940	868	949
	전년대비	18.0%	19.1%	24.3%	△7.7%	32.0%
	전체 교역 대비	10.0%	10.4%	11.0%	12.6%	14.2%
	FTA 교역 비중					

자료 : 관세청 FTA 활용 자료, 2011년

3.2 한·EU FTA 추진 현황

1) 한·EU FTA의 의의

한·EU FTA가 체결되고 '11.07 본격 발효되면 동아시아 국가로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로써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08년 기준으로 한국과 EU 및 주요 국가간 교역·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 교역액은 984억 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한국과 차지하는 교역규모가 큰 시장이다.

한·EU FTA가 본격 발효되면 관세인하로 인해 한국의 상품이 EU 시장에서 갖는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되며, 이로써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EU FTA는 EU 27개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의 FTA 체결로써, 교역·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67%에 달하나, 국내 총 부가가치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해 낮은 생산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 부문의 개방은 중장기적으로 경쟁과 학습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간 GDP 5.6% 증가, 25만개 일자리 창출, 15년간 연평균 3.6억 달러 무역흑자 증대를 전망⁹⁾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EU에서 무역 빚장을 풀고, 한국 기업의 경제 영토¹⁰⁾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을 확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한국의 10개 연구기관의 분석결과, 2010

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27개 EU회원국은 한국의 기업에 다양한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아울러 교역·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선진 기법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3> 한국과 EU 및 주요 국가 간 교역 및 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08년 기준)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체	8,573 (100%)	4,220	4,353	△133
중국	1,683 (19.6%)	914	769	145
EU	984 (11.5%)	584	400	184
미국	847 (9.9%)	464	384	80
일본	892 (10.4%)	283	610	△327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년

2) 한 · EU 산업별 및 주요품목별 교역현황

한국과 EU간 산업별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 584억 달러 중 공산품이 582억 달러로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이 1억 달러, 농축임산물이 0.8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전체 교역량 400억 달러 중 공산품이 379억 달러로 95%를 차지하고, 농축임산물 19.6억 달러, 수산물 0.1억 달러로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10) 한·EU 경제규모 17.2조 달러로 NAFTA 경제규모 16.8조 달러를 앞서고 있는 상황, 기 체결된 FTA와 한·미 FTA, 한·EU FTA를 모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0.9%(국토면적은 0.1%)가 될 것이다.

<표 3-4> 한·EU 산업별 교역 현황

(단위 : 억달러, '08년 기준)

구 분	합 계	공산품	농축임산물	수산물
수 출	584	582	0.8	1.0
수 입	400	379	19.6	0.9
수 지	183.9	202.7	△18.8	0.1

자료 : 관세청 FTA 활용자료, 2010년

또한 한·EU간 주요 수출 교역 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선박이 100억 달러로 17.2%, 무선전화기가 75억 달러로 12.8%, 승용차가 52억 달러로 8.9%, 평판 디스플레이가 39억 달러, 6.7%로 이러한 품목들이 전체 수출의 약 50% 이상 차지하며, 그 밖에 반도체, 경유, 칼라 TV, 광학기기 부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교역량 584억 달러 중 주요 수출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3.3%이며, 이러한 품목들의 관세율은 0~14%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간 수입품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약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 부품, 승용차 등이 약 15~16억 달러로 전체 수입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이며, 그 밖에 기타 정밀화학 원료, 집적회로 반도체, 기타 화학공업 제품, 원동기, 펌프 등 전체 수입물품 교역량 100억 달러 중 10대 품목 비중이 123억 달러로 3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한 · EU 10대 교역품목 현황

(단위 : 억달러, '08년 기준)

수출품목(관세율)	금액 (억불)	비중	수입품목(관세율)	금액 (억불)	비중
선박 (0~2.7%)	100	17.2%	의약품 (8%)	16	4.0%
무선전화기 (0%)	75	12.8%	반도체제조용장비 (0%)	16	3.9%
승용차 (10%)	52	8.9%	자동차부품 (8%)	15	3.9%
평판디스플레이 (3.7%)	39	6.7%	승용차 (8%)	15	3.9%
자동차부품 (1.7~4.5%)	24	4.1%	기타정밀화학원료 (6.5%)	12	3.1%
집적회로반도체 (0%)	19	3.3%	집적회로반도체 (0%)	12	3.0%
제트유및등유 (3.5~4.7%)	16	2.7%	기타화학공업제품 (6.5%)	10	2.4%
경유 (3.5~3.7%)	16	2.7%	원동기 (8%)	9	2.4%
칼라TV (14%)	14	2.5%	펌프 (8%)	9	2.1%
광학기기부품 (2.9~6.7%)	14	2.3%	기타기계류 (8%)	8	2.0%
소계	369	63.3%	소계	123	30.7%
전체	584	100%	전체	400	100%

자료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자료, 2010년

3) 한 · EU FTA 추진 경과

‘03.08 FTA 추진 로드맵에 의거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하여 한·EU FTA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05.07 미국, 캐나다, 아세안, 인도와 FTA를 추진하였고, ‘06년 7월과 9월에 각각 EU측과 두 차례 예비협의를 개최한 결과 유럽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준비작업도 병행하게 되었는데, '05. 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한·EU FTA의 영향 및 협상방향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06.11.07 FTA 실무추진회의 및 '07.04.09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고, '06.09.27 및 12.18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되었고, '06.11.24 한·EU FTA 관련 공청회 및 '06.12.06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07.05.0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출범을 결정함으로써 한·EU FTA 출범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07.05.06 협상출범 이후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09.03. 23~24 열린 제8차 서울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¹¹⁾에 대하여 협상단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09.06.26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관세환급을 포함한 협상 잔여 쟁점에 대하여 일괄적인 최종 타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09.07.13 EU 의장국인 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09.10.15. 벨기에에서 한·EU FTA 가서명을 하고 협정문 번역작업¹²⁾을 거쳐 한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10년 발효를 목표로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0.10.06 EU 이사회 본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로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EU FTA 정식 서명 후, EU 의회(프랑스)는 '11.02.17 본 회의를 개최하여 “한·EU FTA 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한·EU FTA 발효를 위한 EU측 절차

11) 관세환급 및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은 미합의 되었음.

12) 한국어 및 EU측 22개 공식 언어.

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한국에서는 양측이 합의한 대로 ‘11.07.01 한·EU FTA가 잠정 발효가 될 수 있도록 ‘10.10.25 “한·EU FTA 비준 동의안”¹³⁾을 국회에 제출, 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표 3-6> 한 · EU FTA 협상 개최 일시 및 장소

차수	개최 일시	개최 장소	협상 주요 내용
1차	‘07. 5. 7-11	서울	양허협상 기본 틀 마련
2차	‘07. 7. 16-20	브뤼셀	본격적 협상
3차	‘07. 9. 17-2.1	브뤼셀	상품양허 수정안 협의
4차	‘07. 10. 15-19	서울	개별품목 등 협의
5차	‘07. 11. 19-23	브뤼셀	세부 품목별 협의
6차	‘08. 1. 28-2.1	서울	분과별 협상 협의
7차	‘08. 5. 12-15	브뤼셀	원산지 관련 협의
8차	‘09. 3. 23-24	서울	대부분 협상 합의
추가	‘09. 6. 26	서울	잔여쟁점 합의안 도출
추가	‘09. 7. 13	스웨덴	EU 의장국과 타결선언
가서명	‘09. 10. 15	벨기에	가서명
정식서명	‘10. 10. 6	벨기에	정식서명
	‘10. 10. 25	서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11. 2. 17	프랑스	EU측 본회의 통과

자료 :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책자료집 및 재구성, 2009년

13) 2011. 5. 4 한국의 국회는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

4) 한 · EU FTA 협상 주요 내용

(1) 공산품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EU측은 전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한국측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여 EU측이 다소 조기에 관세를 철폐¹⁴⁾하는 방식을 확보하였다.

한국측의 관심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cc 초과 중·대형은 3년내, 배기량 1,500cc 이하 소형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표 3-7> 양허 단계별 공산품 관세 철폐

양허 단계	한 · EU FTA			
	한국 양허(비중)		EU 양허(비중)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즉시철폐(A)	90.7%	69.4%	97.3%	76.7%
3년철폐(B)	5.1%	22.4%	2.1%	16.6%
조기철폐(A+B)	95.8%	91.8%	99.4%	93.3%
5년철폐	3.7%	6.9%	0.6%	6.7%
7년철폐	0.5%	1.3%	-	
10년철폐	-	-	-	-
총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자료 및 재구성, 2010년

14) 조기 철폐 비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EU측 99.4%, 한국측 95.8%.

<표 3-8> 상품 관세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공산품)

구분	한국측	EU측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엔진 및 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 신발(17),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모니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등	해당없음

자료 : 기획재정부 FTA 협상 내용 자료, 2010년

() : 관세율

(2) 농산물

한·EU 양측은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여,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냉장 삼겹살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으로 확보하여 '14년 철폐되는 한·미 FTA보다 장기로 추진하고,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하여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결

과를 확보하였다.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합의하였고, 한국측의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¹⁵⁾하도록 하였다.

오렌지, 포도 등에 대해서는 계절 관세를 도입하고, 사과, 배 등은 세번을 분리하여 한국의 주된 생산품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9개 품목¹⁶⁾에 대해 적용하며,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양허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전·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에 대해 관세율 할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5) 현행관세유지 품목은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299.7~324%), 감자(304%), 인삼(222.8~754.3%), 감귤(144%), 흑설탕(40%)임.

16) 쇠고기, 냉장 돼지고기, 맥주맥·맥아, 사과,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전분, 변성전분.

<표 3-9> 상품 관세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농산물)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품목
양허제외	16	1.1	쌀 및 쌀 관련 제품
즉시	610	42.1	홍차, 커피(생두), 포도주, 코코넛, 원당, 아몬드, 파스타, 화훼류 등
2년	3	0.2	레몬, 자두, 아보카도
3년	14	1.0	밀가루, 마가린, 오렌지 주스(냉동), 스카치 위스키 등
5년	278	19.2	데킬라, 보드카, 브랜디, 초코렛, 사탕, 비스킷, 인스턴트 커피, 소시지, 바나나, 그레이프 프루트, 콩 등
6년	3	0.2	호두(탈각)
7년	45	3.1	과일주스(레몬 등), 잼, 맥주, 밀, 무화과, 아이스크림 등
10년	275	19.0	돼지고기(삼겹살 등), 혼합분유, 담배, 들깨,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매실, 과일주스(딸기, 복숭아 등), 메주, 춘장, 레몬, 로얄제리 등
예외적 취급 ¹⁷⁾	205	14.1	감귤, 고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인삼류, 참기름, 참깨, 전탈지분유, 천연꿀, 오렌지, 포도, 치즈, 사과(후지), 배(동양배), 맥아, 맥주맥, 쇠고기 등
합계	1,449	100.0	

자료 : 기획재정부(FTA 국내대책본부 자료), 2009년

(3) 자동차 비관세 부문

자동차 비관세 부문을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안전 기준은 양측의 국내기준과 유사한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국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기준은 '09.01 부터 시행중인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¹⁸⁾

17) 예외적 취급 :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관세율할당, 10년 초과 장기철폐 중목.

18) FAS(Fleet average system) : 제작자에게 다양한 배출기준(LEV, ULEV, SULEV, ZEV)을 허용하여

가 적용되나, 1만대 이하 소량판매 제작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과도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¹⁹⁾에 대해서는 EU가 ‘14년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새로운 OBD 기준에 대해 한국측 OBD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합의하였다.

(4) 원산지

원산지(Country of Origin)²⁰⁾ 분야는 주로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은 원칙적으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원산지 의정서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기로 원산지 의정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혜관세 신청시 수입자·수출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원산지 증명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산지 일반 규정으로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합의사항은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자란 동물,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채취한 광물 및 천연자원 등 상품을 말한다. 둘째, 완전생산기준 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자별 전체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

19) 자기진단장치(OBD:On-Board Diagnostics)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할 때 차내 계기판의 정비 지시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0) 원산지(Country of Origin) :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함.

세번변경기준²¹⁾, 부가가치기준²²⁾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양국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공장도가)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규정한 미소기준(De Minimis)²³⁾과 역내산(EU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²⁴⁾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만 섬유류(50-63류)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해서(Introductory Notes)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섬유미소기준을 적용기로 하였다.

한·EU FTA 원산지 부문에 있어서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과 관련하여 역외산 부품 및 재료의 사용 비율이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수준²⁵⁾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기로 하며, EU측은 그 동안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고수하며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을 주장하였으나,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 처음으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정하였으며, 발효 1년 후 구성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세번변경기준 : HS변경기준으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22) 부가가치기준(RVC : Regional Value of contents)은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확한 부가가치비율 환산을 위한 원가계산 및 원가공개가 필요한 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좋다.

23) 미소기준(De Minimis) :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서 반영

24) 누적기준 : EU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

25)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45~50%.

<표 3-10> 섬유류 미소기준 적용

구 분	한·EU FTA	한·미 FTA
섬유류(50-63류) 미소기준	- 품목마다 다른 미소기준 적용 - 8~35%, 중량 및 공장도가격기준 등 다양	중량기준 7%(섬유협정)

자료 : 외교통상부 FTA 활용자료, 2010년

<표 3-11>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품 목	원산지 기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 : 역외산 부품비율 45% 이하 - 자동차 부품 : 역외산 부품비율 50%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 - 철도차량은 세 번변경기준,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를 적용
기계, 전기·전자	- 세번변경기준과 역외산 부품비율 45-50%중 선택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기준 - 단, 섬유사 및 직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스코레이온사 및 나일론 스테이플사는 일정범위 내에서 역외산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 * 직물기준(Fabric Forward) :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 변형 기준이라고도 함
화학제품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 번변경기준 적용
비철금속	-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 적용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산 갑피(upper)와 안창 사용(inner sole)이 인정되나,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이하 기준 적용가능

자료 : 외교통상부 FTA 활용자료, 2010년

<표 3-12> 주요 농산물 원산지 규정

대상품목	원산지 기준
쌀·녹차·인삼·참기름 및 관련 제품	역내산(완전생산기준)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역내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완전생산기준)
수 산 물	역내에서 어획된 것(완전생산기준)
담 배	역외산 재료는 30%까지 허용하되,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확보

자료 : 외교통상부 FTA 활용자료, 2010년

(5) 관세환급

관세환급(Drawback) 부문에 있어 원칙적으로 한국의 관세환급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비율을 제한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Safeguard)²⁶⁾ 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보면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 가능한 것이 기본원칙이며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 그 구체적 요건이라 하겠다. 또한 경감요인으로는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 등 상대국 수출용도 이외의 수요에 기인한 경우 상기증가율의 경감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에 있어 관세환급제도 검토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일방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26) 세이프가드(Safeguard) : 자본이동을 일시 제한하는 무역규제 조치의 하나.

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하고, 발동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객관적인 패널 3인을 구성하여 결정)하고, 패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며 협정 발효 5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Review)하기로 하였다.

(6) 서비스 및 투자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는 법률·회계·세무와 같은 전문직, 육상운송, 우편, 건설 서비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EU측 개방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한국측 115개 분야보다 넓은 수준이며 일부 환경서비스 등은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 뿐 만 아니라, 제조업 및 광업 등 비(非)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한·EU FTA에서는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적용토록 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²⁷⁾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7) 지리적 표시(GIs)

한·EU 양측은 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GIs)²⁸⁾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기로 하고, 이미 등록된 선행상표 사용은 지리적표시 보호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을 보장하기로 협상하였다.

27) 현재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어 제외토록 함.

28)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지역 이름을 표시해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명칭을 배타적 권리로 인정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임.

3.3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의 필요성 및 혜택

1) 인증수출자 인증의 필요성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한국의 수출기업이 6천유로 이상의 물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았을 경우, 6천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서는 EU 수출업체들로 하여금 조속히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수출업체 방문지도, 컨설팅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EU의 경우는 1975년부터 인증수출자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므로, 한·EU FTA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인증수출자 미지정으로 인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경우는 '10.04에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가 정착되고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있어 그 기간이 EU에 비하여 현저히 짧으므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인증수출자로 신청·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증수출자 지정시 혜택

일반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FTA 협정 체결국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지정시 협정별 혜택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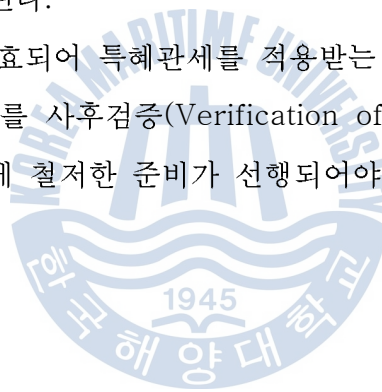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발급형태²⁹⁾가 기관발급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신청시 매번 5

29) 기관발급형태 및 자율발급형태로 구분.

개 이상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3년 동안 완화되었다. 한·EFTA FTA의 경우 상업송장(Invoice) 등 원산지 증명 서류에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도록 하여 전산발급이 자유로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EU FTA가 발효되어 수출업체가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EU FTA상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6천유로 이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서류나 서명·날인 없이 인증번호 기재만으로 신고서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한·EU FTA가 발효되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EU에서는 수입건의 0.5%를 선별하여 원산지를 사후검증(Verification of Origin)할 것이 예상되므로 수출기업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3>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 소명서 ④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⑤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EU	미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유로 이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 FTA 활용 실무 매뉴얼, 2011년

3.4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

한-EU FTA가 '11.07.01 잠정 발효예정이나, 건별 6천 유로 이상 EU 수출 대상업체 8,206개 업체('10년 기준) 중 '11.03.18 까지 인증을 완료한 기업은 623개이다. 이 중 업체별 지정기업 수는 130개, 품목별 지정기업 수는 493개로 <표 3-14>의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대(對) EU 수출기업 수 대비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7.6%, 수출금액 기준 대비 52.2%에 미치는 수준이다.

한-EU FTA 체제하에서 한국 기업들은 6천유로 이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 동 제도가 '10.04 도입되어, 수출기업 CEO의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 검증능력미비 등으로 인증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발효될 한-EU FTA 체제하에서 한국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EU는 “인증수출자제도”를 1975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므로 EU 기업들은 FTA 발효 즉시 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14>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

구 분	건별 6천유로 이상 EU 수출('10년)	인증 완료	진도율
대상업체수	8,206	623개(업체별130, 품목별 493)	7.6%
수출금액	미화 247.6억불	129.2억불	52.2%

자료 : 관세청 FTA 활용자료 및 재구성
'11. 3. 18현재

<표 3-15> 인증수출자 지정 총괄 현황

구 분	지정기업수	‘10.4월이전	‘10.4월이후	2011년
업체별	130	-	59	71
품목별	600	66	342	192
합 계	730	66	401	263

자료 : 관세청 FTA 활용자료 및 재구성
‘11. 3. 18현재

‘10.09.13 대(對)EU 수출기업 7,664개 업체에게 인증수출자 인증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문을 관세청에서 발송하여 분석한 결과, ‘10.10.15 현재 총 1,606개 업체가 응답하였고, 응답업체 중 85.9%인 1,380개 업체가 인증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업체 중 인증을 희망하지 않는 업체 226개 및 기업에서 내부검토 중이거나 여타의 이유로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은 업체 3,613개에 대해 인증수출자로서의 인증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인증 희망기업에 대한 중점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인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6> 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 희망 여부 등 설문조사 결과

구 분		기업수	비율
응답업체	인증 희망	1,380개	18.0%
	인증 미희망	226개	2.9%
응답거부(휴/폐업·수신거부 등)		2,445개	32.0%
미응답업체(기업 내부검토중)		3,613개	47.1%
합 계		7,664개	100.0%

자료 : 관세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인용, 2010년



제 4 장 한 · EU FTA 인증수출자 지정확대 추진 방안

4.1 정부의 단계별 추진 방안

1) FTA 행정수요에 맞는 관세행정 조직 확대 개편 필요성

FTA 업무는 협상 중심에서 집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주관 부서인 관세청은 '11.03말 현재 관세청 본청에는 FTA 종합대책단 형태 및 6개 본부세관에는 FTA 집행센터 형태의 조직으로 102명의 인력을 운영 중에 있어, 효율적인 FTA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12년까지 FTA 발효국가는 현재 16개국에서 45개국으로, 교역비중은 15%에서 36%로 큰 폭으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약 10만여개 중소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관리 지원 및 매년 연평균 3,500여개의 신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과 FTA 교역물품에 대한 세무조사³⁰⁾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FTA 조직과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FTA 집행기능 확대를 위하여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집행센터 기구를 정식 직제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인 관리방안으로는 관세청 FTA 집행국 신설과 FTA 집행기획부서, FTA 대외협력부서, 원산지 검증부서로 세분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도 FTA 전담인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30) 연간 검증 건수는 독일 8천건, 미국 5천건, 스위스 3천6백건, 캐나다 2천4백건, 한국 30여건이다.

한·EU FTA 및 한·미 FTA의 본격 발효 등으로 FTA 업무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FTA 전담부서 신설³¹⁾과 행정수요에 대비한 인력 확충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타협정 인증기업 EU인증수출자로 전환 및 사전검증 활용

아세안, 인도 등 타협정 인증기업³²⁾의 EU 인증수출자 전환을 위해서는 인증 받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한·EU FTA와 동일한 업체에 대해 인증신청 유도 및 지정 완료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별 수출기업이 해당 기업 관할 본부세관 FTA 집행센터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도록 직접 공문을 시달하여 동 제도를 활용토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EU FTA 관련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업체에 대하여는 신속한 인증처리와 함께 한·EU FTA와 관련하여 심사 중인 건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전검증 완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즉시 지정하여야 하며, 현재 사전검증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 검증 완료시 심사 생략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 우선인증기업 파악·관리를 통한 적극적 인증 지정

관세당국에서는 해당 업체의 특성 및 역량을 파악하여 우선인증대상 업체 지정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업체관리를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설문서를 통

31) 2011.04.14.자로 관세청 1국 2과, 세관 5개과 신설, 순증가 인력 47명 포함, 184명 규모의 FTA 전담 조직 공식출범.

32)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자료에 의하면 2010.10. 기준 타협정 인증업체수는 84개이며, 인증품목수 201개 품목으로 아세안 179개, 인도 19개, EFTA 3개로 한·아세안 FTA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 실질적인 인증 요청기업을 파악³³⁾ 하여야 할 것이다.

업체 특성에 따른 집중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증업무의 신속·효율화를 위해 업체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품목이나 적용협정이 다양한 경우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업체별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별품목이나 적용협정이 한정된 경우에는 본부세관에서 품목별 인증제도를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서면으로 설문조사한 결과³⁴⁾ FTA 원산지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증 신청을 유도하고, FTA 원산지 관련 인지가 없는 업체들에 대하여는 교육, 컨설팅 등 적극적인 제공으로 업체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서 인증실명제를 도입하면 대상업체에 대한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전준비에서 인증지정까지 one-stop 컨설팅을 제공하여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 인증준비, 홍보, 상담, 교육, 컨설팅, FTA-PASS 제공 등을 지원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 행정지도·홍보·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인증지정 확대

인증수출자 지정요청 기업에 대해 전화상담 등 개별 상담을 통해 인증신청 유도 및 문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산업별 FTA 원산지관리 실무자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FTA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업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3) 관세청FTA종합대책단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0.12.현재 1,633개 업체 중 1,398개(85.6% 수준).

34) 2010.12. 현재 236개 업체(응답 업체 중 14.5%)만 원산지결정기준 인지.

또한 중소기업을 직접방문,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별 원산지관리 방안, FTA-PASS 제공 등 원활한 원산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제공과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법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공익광고, 특집기사, 스마트폰, 홍보 이메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고취하고 관세청장 서한문 발송 및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CEO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국내·외 FTA 설명회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자 역량을 최대한 증대하여야 한다.

대외 유관기관과 상생적 협조를 통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인증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대면접촉이 많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인증지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연수원 교육과정 증대, 주기적 인증실태 점검 등을 통한 내부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인증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4.2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1) 대(對)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 완료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하여 관세행정 인력을 총동원하여, 한·EU FTA 발효 전에 대(對)EU 수출액 기준 247.6억 달러의 70%까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 완료하도록 체계적 인증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업체별 전담자 지정 등 인증실명제 도입을 통한 대상업체 책임자를 지정한다.

둘째, 직접통화 및 방문을 통한 인증 지정 지원, EU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요건, 절차,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지역별 인증수출자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제도 소개 및 원산지관리 방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인증수출자 지정요청 기업에 대해 개별 상담을 통한 인증신청 유도, 문의사항 해결, FTA 원산지관리 실무자 교육 제공,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FTA-PASS 시스템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인증 지정 방안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친기업적 인증수출자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한국에서는 인증수출자제도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증 심사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중 관련 법령 위반이력이 있는 기업은 향후 2-5년간 인증이 불가능한 점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이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법규준수도 규정을 합리화하여 경미한 처벌경험이 있는 기업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개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인증심사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업체 방문, 컨설팅 등 제도 홍보에 FTA 전담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EU FTA 발효 후 EU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기업의 대응체계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구축한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체계를 유지·개선시키기 위하여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자체 점검실시 및 세관으로의 결과보고를 통해 자발적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다수 기업의 원산지관리를 맡을 경우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기업의 경우 자체 정기 점검시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실제 관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통합관리 체계 마련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수출용원재료 등의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도입, 관세사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수출자 요구시 재료공급자의 원재료 확인서 제공의무 법제화, 원산지 자율증명협정(한·EU, 한·미 FTA 등)의 FTA 수출활용 분석용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등 증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원산지 증명제도에서는 FTA별로 발급기관, 절차, 용도가 상이하여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주관부서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09년도 상공회의소가 무분별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판정³⁵⁾되어 국가 브랜드 및 선량한 기업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상대국 세관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선량한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첫째,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혜업무와 심사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특혜업무를 통합하여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에서 원산지증명 및 단속을 포함한 검증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35)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자료에 의하면 EU가 검증을 요청한 245건의 원산지증명서 중 220건이 허위로 판명(2009년).

둘째, FTA 협정 등에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관세청, 상공회의소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증명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특혜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관세청 시스템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관세청)로 하며, 발급기관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출입에 사용되는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통합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주관부서를 기획재정부(관세청)로 일원화하고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원산지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상대국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선량한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4) 수출기업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확대 및 통관애로 해소 지원

정부의 FTA 지원정책이 수출기업의 FTA 활용 측면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능력은 저조한 실정이며, 한·EU FTA 발효시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EU측 세관의 고강도 원산지 검증이 예상³⁶⁾되어 국내기업의 피해 및 국가 이미지 저하가 우려되므로 수출기업의 원산지 자율관리 및 검증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산지 사전검증의 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한·EU FTA 발효 전까지 EU 지역 수출기업 중 원산지 검증 위험이 높은 산업 또는 업종에 대하여 검증결과 적합 판정 업체는 인증수출자 심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업체의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하여 기업·세관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FTA 통관지원 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36)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3,000여건의 원산지검증이 예상된다. EU측은 특혜수입건의 0.5%를 무작위 추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1,2차에 걸쳐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 사전 검증을 실시 중에 있다.

기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세행정 및 정부 차원에서 최고 책임자의 국제협력 회의 개최시 애로사항 의제화 및 수출기업의 현지 주재관 등을 통한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4.3 향후 EU측 세무조사 대비 행정 지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원산지검증 규정에 의하면 수입국 세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수출국 세관에 요청할 수 있고, 수입국 세관은 10개월 이내에 수출국 세관의 회신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³⁷⁾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측 동향을 보면, 27개 회원국은 물론 EU 집행위 차원의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의 LCD, 자동차부품, 승용차, 타이어, 섬유·의류, 백색가전 등에 대하여 연 3천건의 조사가 예상된다. 한국 수출기업 대다수는 수출 후 EU측의 엄격한 세무조사 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출기업에 대하여 EU측 사후 세무조사 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통하여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기업이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거나 추징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7) EU 관세법상 원산지위반 시 제재로는 물품금액 3배 상당 벌금 또는 6개월 미만 징역형을 처할 수 있으며, 한국측에서는 원산지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인증수출자 취소(2년간 인증이 불가)가 가능하다.

제 5 장 결 론

5.1 연구 결과

세계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한국도 '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및 인도와 FTA를 체결하였고,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시장 확보를 위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1.07 본격 발효를 앞둔 시점에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6,000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수출기업에서는 동 제도가 '10.04에 도입되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체제하에서 한국의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하여 관세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관세당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하여 그 의미와 종류, 관련규정, 제도의 연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확대 추진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단계별 추진방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향후 EU측 세

무조사 대비 행정지원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부의 단계별 추진방안으로 첫째, FTA 행정수요에 맞는 관세행정 조직 확대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의 증가와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 지원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타협정 인증기업의 EU 인증수출자로의 전환 및 사전검증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FTA 등 타협정 인증기업 84개 업체와 201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된 업체를 신속하게 인증 전환함과 동시에 한-EU FTA 심사 중인 건에 대하여 우선 심사 완료하여 인증 지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우선인증기업 파악·관리를 통한 적극적 인증 지정을 위해서는 인증지정 의사를 피력한 업체를 우선 지정하고, 인증 추진업체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와 신속한 인증을 위한 one-stop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지도·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인증지정 확대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첫째, 대(對)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 인증목표를 설정하여 업체별 전담자 지정 등 인증실명제 도입을 통하여 지정된 책임자와 직접적인 방법으로 인증요건, 절차, 준비사항 등 지역별 인증수출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친기업적 인증수출자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심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절차, 발급기관, 용도 등이 상이하여 수출기업들이 혼선을 초래하는 제도 및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체제 마련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수출기업의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확대 및 통관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EU측 세무조사를 대비한 제도의 안내와 컨설팅 등을 통하

여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기업이 관세특혜 배제 및 추징 등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나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최근의 통상환경은 국가간 또는 지역연합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간 교역을 통하여 양적인 경제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2004년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확대·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EU와의 본격적인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EU측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미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10.04 도입되어 아직은 초기단계로 한국 수출기업이 이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 및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이론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지정 확대 추진방안을 정부차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관한 문제점 등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고, 본 제도를 활용하고 확대하기 위한 수출기업 측면에서의 방안 또한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정부기관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추진하고 지원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며, 추진방안이 다소 추상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확대·추진방

안과 관련이 있는 다수의 정부 부처 중 관세당국에 한정하여 그 방안을 살펴본 것 또한 본 논문의 한계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對) EU 수출기업 중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인증 가능 여부 등 기존의 관세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직접 인용함으로써 본 연구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현실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향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생산기업이나 수출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FTA·관세행정 전략”, 2007년
- 관세청, “FTA 관련 EU 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방안”, 2010년, 2011년
- 관세청, “FTA 주요업무 추진자료”, 2010년, 2011년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 기획재정부, “한·EU FTA 주요내용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2009년
- 기획재정부외 5개부처,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2009년
- 기획재정부, “FTA 활용 실무매뉴얼”, 2011년
- 김준환, “한·미 FTA원산지규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년
- 김홍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공청회 자료,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시다발적 FTA 추진 및 경제적 효과”, 2007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9개기관, “한·EU FTA의 경제적효과분석”, 2010년
- 부산세관, “FTA 관세행정 컨설팅 가이드북”, 2008년
- 부산세관, “FTA 업무보고 자료”, 2010년, 2011년
- 부산세관, “FTA 집행센터 인증수출자제도매뉴얼”, 2010년
- 삼성경제연구소(김득갑),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2007년
- 성윤갑, “FTA 관세특례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년
- 윤대영, “FTA확산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년
- 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2009년

외교통상부, “FTA 설명집”, 2009년
외교통상부, “FTA 협상 정책자료집”, 2009년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2011년
임윤상,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국
은행, 2002년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4년
지식경제부, “FTA 포털 정책자료”, 2011년
최장우, “FTA 원산지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5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 법령집”, 2006년
홍유수·이준호·권선윤(저), “거대경제권 FTA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2008년
황규선,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실태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Maria J. Garcia, “Trade in EU Foreign Relations : EU-Chile Free Trade
Agreement”, 2004년
Weiler, J. H.H, “The EU, The WTO and the NAFTA-Towards a Common Law of
International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년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년
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 홈페이지 <http://cert.korcham.net>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지식경제부 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EU홈페이지 <http://europa.eu>

EU상공회의소 www.eucck.org

EU집행위원회 www.ec.europa.eu

전 세계 FTA 현황 www.bilaterals.org

